



タイトル Title	日本における「地域研究」と「外国研究」としての朝鮮／韓国研究： 政治学を中心に [本文:韓国語]
著者 Author(s)	Kimura, Kan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ソウル大学校開校60周年及び奎尚閣成立230周年韓国学国際学術会議 ：21世紀韓国学の進路の模索、;
刊行日 Issue date	2006-06-01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 会議発表論文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C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90000391

Create Date: 2018-08-14

머리말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계의 모습을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예전에는 근대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또한 안전보장의 제공과 기간산업의 정비, 나아가서는 획일적 문화의 제공 등에 통해 근대사회를 그 근저로부터 지탱해 온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현상이 있다. 시장과 이에 동반되는 여러 민간 부문의 발달에 의해 오늘날의 국민국가는 그 역할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통제능력을 점점 잃어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능부전에까지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오늘날의 국민국가는 예전과 같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큰 권위를 가지는 조직이지는 않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조직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때로는 가장 혐오받고 경멸당하는 조직이기까지 하다.

국민국가는 「근대사회에서의 왕좌」에서 추방당했다. 당연히 이 현상은 국민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의 의미를 크게 변용시키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의 개개인의 최대의 의무. 이는 납세나 징병, 교육의 의무 그 어느것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반드시 한 특정 국민국가에 속한다는 것, 바꾸어 말하자면 어딘가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납세 등 그밖의 이른바 「의무」는 정작 그 결과에 불과했다. 그 배경으로는 근대사회의 절대자로서의 국민국가의 존재가 있었으며, 국민국가에는 자신의 국민을 통제하는 의무가 엄격히 부과되었고, 반대로 개개인에게는 스스로 국민으로서 속하고 있는 국민국가에 대한 절대복종이 엄격히 요구되었다. 비유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 시대, 인간은 개인이기 이전에 「국민」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국민」마다 별개의 규칙을 가지는 별개 사회의 시장을 형성하여,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사상면에서 통제하였다.

세계화가 사회에 대한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나아가 그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특정 국민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를 축소시켰다. 오늘날 어느 한 국민국가의 「국민」인 것이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전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개인의 경력의 변화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오늘날 어느 한 국민국가에서 실패를 하거나 그 국가와의 관계를 잃는다는 것이 그 개인의 경력이 끝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더이상 그 영역에서조차도 국가는 더이상 절대적 위신 따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사회가 오늘날 과연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 것인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역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학문영역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많은 경우에서 종래의 국민국가의 이름이나 혹은 이와 연결시켜 확장된 영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학문에 있어서는, 분석의 「단위」가 국민국가나 국민,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것으로 되어있어, 당연히 그 「단위」자체의 「단위」로서의 유효성 축소는 학문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점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논자의 말을 빌자면 지역연구자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¹에 빠져있어서 이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지탱되어온 학문은, 내셔널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의해 지탱되어 온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현상과의 괴리때문에 사라져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 지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국민국가와 이를 지탱하는 내셔널리즘이 「사라질」 운명에 있는지 여부는 제쳐두고서라도 우리들 눈앞에 세계화와 그 결과로서의 유효한 분석단위인 국민국가의 의의축소가 놓여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는 우리들 지역연구자가 만일 그 「지역」과 지금까지의 방식에만 집착한다면 학문전체의 의의는 점점 상실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들 지역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가. 본 발표는 이러한 의문에

¹ 앤도우 켄(遠藤乾) 「思想としてのヨーロッパ統合：方法論的ナショナリズムへの懷疑(사상으로서의 유럽통합：방법론적 내셔널리즘에 대한 회의)」 『創文』 2002년 1/2월호 (439호)

부딪쳐보고자 한 필자의 실험적 고찰이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연구 중에서도 조선/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특히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97년말 한국의 통화위기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의 좁은 영역에서 서로 마주보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세계화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통화위기 자체의 과정에서 명백해 진 것처럼, 이제는 각 나라는 자국과 그 이웃영역에서의 경제정책 하나에 대해서조차 국제사회와의 협조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가끔 오해받듯이- 「국경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오히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국, 각개인의 「지리적 배치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래처와의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서로의 영역이 가깝다는 것이 서로가 관심, 교류, 그 결과로서의 거래관계를 가진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역내 네트워크가 완비되어 거의 완성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국내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다. 코베(神戸) 가 돛토리(鳥取)와 도쿄 어느쪽의 동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중요한 점은 일본의 조선/한국연구도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적 현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우선 이 점을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정치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제 1 장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의 현재위치

2002년은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한 해였다. 초반에는 이 해에 개최된 한일월드컵공동주최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한 호의적 보도가 이어졌다. 이때는 「한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되면서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런데 후반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변하여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가 터져나와 여지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의 다양한 측면들이 일반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조선/한국연구는 여러 의미에서 주목을 받게 되어 앞길에 희망의 전도가 언뜻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예를 들어 표 1은 NACSIS의 국내주요대학 도서관연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들 대학도서관이 소장하는 서적제목에 「한국」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적의 타이틀 수를 서적의 발행년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는 중국어 혹은 한국어 서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일본어 혹은 이들 언어로 쓰여진 서적 중에 「한국」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적을, 이들 전국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제목의 저작을 구입했는가(혹은 구입한 제목을 전자데이터베이스화시켰는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시기별로 어떻게 제목을 붙이는 지 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정도에 불과하지만, 어찌됐건 일본의 조선/한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수요 증감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에 대한 관심은 90년대에 들어서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교류의 증대가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의 증대로 연결됐으리라는 현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화의 진행이 결과적으로는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일본과의 교류를 증대시켰다는 점이며,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증대는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령 한 특정사회에서 「외국」에 대한 관심 완화가 자원의 한계 등에 의해 일정 범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해당사회에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 앞서 말했듯이 이웃나라 혹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이 조선/한국연구의 장래와 그 수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연구로서의 조선/한국연구의 수요감퇴는 어느정도 세계적 현상이다. 그 배경으로는 80년대 한국이

극적인 경제성장과 또 이만큼의 극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90년대 한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표 2는 표 1과 같은 검색을 미국의 주요대학인 하버드대학²의 소장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대학에서는 ‘Korea’나 ‘Hanguk’을 제목에 포함한 장서가 그나마 일관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Kankoku’를 제목에 포함한 장서(압도적 다수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포함한 일본어로 쓰여진 도서이다)수가 90년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크게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상황이 다른 해외의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보았을 때 조선/한국연구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에서의」조선/한국연구의 지위가 급속히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자면 국내에서야말로 그나마 일정관심과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의」조선/한국연구이지만, 그 세계적 수요는 오히려 감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느끼듯이, 예를 들어 60년대와는 달리 오늘날 발행되고 있는 한국어나 영어로 집필된 저작에서, 일제시기의 저작을 제외한 일본어 문헌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연구자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사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일본어따위를 안 하더라도 조선/한국연구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거의 같다. 어쨌든 「일본에서의」조선/한국연구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읽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에서의」조선/한국연구가 비대화된 자부심과는 대조적으로 세계전체의 조선/한국연구에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일본 연구는 「읽히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서 시사하고 싶은 점은 「일본에서의」조선/한국연구가 실제로 국내에서도 고유의 논점이나 분석으로써 알려진 「중심적 저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현저한 것이 정치학 분야에서의 조선/한국연구이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분야에서도 저작 자체는 방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개설적인 텍스트 내지는 시사해설적인 것, 혹은 대조적으로 개별사례만을 다룬 것이다. 전형적인 것은 어떤 저작도 고유의 논점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극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제 왜 「일본에서의 연구」중 정치학 분야 연구가 이러한 상태에 멈춰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두가지의 스테레오 타입

일본의 한국정치연구. 예를 들어 쿠라타 히데야(倉田秀也)는 국제정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연구에 대해 무엇이든간에 「내재적」인 부분에 주목한 연구와 그 이외의 「개별」연구로 구분해서 논한다.³ 물론 필자도 이러한 구분 자체에 딱히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쿠라타가 실제로 이 두가지 카테고리의 예로 든 여러 논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보면, 우리들은 실제로 이 양자에는 단순히 「내재적」연구와 그 외의 「개별」적 연구라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자의 예로 거론되는 여러 논문이 그 분류구분기준에서 당연히 한국정치를 역사적 기원으로부터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한국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논하고 있는 듯 보임에 비해, 쿠라타가 후자의 예로 든 여러 논문은 대부분이 90년대 이후에 쓰여진 「새로운」 연구인데다가 그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도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화로 라고 하는 세계의 비교정치학에서 주목받아 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역사적 접근에 근거한 「오래된」 연구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문제에 착목한 「새로운」 연구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쿠라타의 독창성이 아니다. 물론 그 무의식적인 배경에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 일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전제로 했던 「오래된」한국상과 「새로운」한국상이라 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언론 등을

² 현재 이 대학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과 한반도를 주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같이 존재한다.

³ 倉田秀也 「日本における韓国研究：政治・国際関係(일본에서의 한국연구：정치·국제관계)」 『現代韓国朝鮮研究』 창간호, 2001년

중심으로 폭넓게 보여지는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오래된」 사고방식이 한국, 혹은 한일의 「오래된」 문제 중 무엇인가에 착목하여 이를 집요하게 논의하고 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사고방식이라 함은 「오래된」 문제에 언제까지나 집착하지 않고 「계속 변해가고 있는」 한국과 한일관계에 직접 눈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후자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오래된」 문제에 집착하는 「오래된」 사고방식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생산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함이 시사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한일에 관한 「이분법적」 이해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기회를 빌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⁴. 그렇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쿠라타가 거론한 일련의 논문이 정말 그렇듯이, 이러한 「새로운」연구가 「새로운」 현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연구가 「오래된」 문제에 고집하는 것과 같이, 권위주의체제와 민주화-그 중에는 오늘날의 「시민사회」연구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는 80년대적 이슈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연구라고 생각되었던 연구들이 현실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15년도 더 전에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던 「오래된」문제에 대해서 마치 그 문제가 「새로운」 문제인 양 논의된다고 하는 전도된 상황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의 흐름인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로직으로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활발히 논의되었던 것은 80년대에서 90년에 걸친 시기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도 이미 15년도 넘은 기간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것으로 이 문제 자체가 「새롭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민주화나 경제발전이나 둘다 오늘날의 현실에 연결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일본의 한국정치연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새로운」 논점의 연구가 「오래된」 논점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의 정리된 성과로서 만들어 내는 것에 실패해 왔다는 점은 놓쳐서 안 된다. 사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연구」로서 전개되어 온 미국의 한국정치연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조선/한국정치연구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 「오래된」 연구에서도 「새로운」 연구에서도 일본의 연구가 그 연구분야를 주도하는 「표준」이 될만한 저작, 다시 말해 새로운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그 후 학계의 논쟁을 주도할 만한 연구를 무엇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80년대 이후의 조선/한국정치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읽힌 것은 브루스 커밍스⁵나 스테판 해거드⁶라고 하는 두 미국인의 저작이었다. 이러한 미국 연구의 성공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조선/한국정치연구는 상대적으로 「실패」했으며 또한 미국연구들에 대한 경쟁력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 원인은 앞서 논한 것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연구가 신/구를 불문하고 이미 확립된 논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고유의 논점을 생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정치연구 부진은 연구 스타일에서 연유되는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의 한국정치연구는 세계화의 훨씬 전부터 학문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제 3 장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지지부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성공한 미국의 두 연구는 우리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 특색은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전쟁을 시작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전쟁발발 직후부터 존재해 온 논점을 오히려 「전쟁을 발발시키기에 이르게 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⁴ 이 점에 대해서는 키무라 칸(木村幹)『朝鮮半島を捉え直す (가제) (한반도를 다시 본다)』、集英社新書、近刊

⁵ 말할 나위없이 그 대표저작은 일련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둘러싼 연구이다. Bruce Cumings,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 1)(Studies of the East Asian Institute), Bruce Cumings,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 2) (Studies of the East Asian Institute).

⁶ 대표적 저작은 Stephan Haggard, *Pathways from the Periphery -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이며 본 발표의 분석도 이 저작을 염두에 둔 것이다.

누구인가]라는 논점으로 전화시켜, 나아가 그것을 당시의 미국 체제 자체의 문제로 삼는, 미국역사학 고유의 흐름인 「수정주의」를 둘러싼 논의와 연결시킨 것에 있다. 즉 그것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연구대상으로서는 진부하다고 생각할 법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 그것도 보다 큰 세계사의 구조와도 관련지을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를 재고찰함으로써 연구대상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다.

스테판 해거드의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해거드는 종전 너무나 당연히 「강한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설명되어 온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국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미국정치학 고유의 논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을 둘러싼 종래의 정치경제학적 논의를 확실히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여기에서 한국경제발전의 과정은 단순히 극동에 위치한 일국의 경제발전에서부터, 타국의 경제발전의 하나의 모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어, 이러한 연구는 조선/한국연구의 범위를 크게 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양자에 공통되는 점은 여러가지 있다. 첫번째, 양자의 논점이 모두 한국이라고 하는 연구대상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역사학이나 정치학이라고 하는 고유의 학문적 체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따라서 그 논점에서 시사되는 구조의 적용가능성이 원래의 조선/한국이라 하는 틀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두번째, 이러한 성격상 당연히 그들의 저작이 최종목적으로 삼은 것이 사실의 단순 「묘사」는 물론, 일정 사실들에 대한 「설명」의 범위를 넘어섰다. 브루스 커밍스가 단순히 「한국전쟁의 기원」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스테판 해거드 또한 한국 그 자체의 경제발전은 하나의 케이스로서의 의미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단순한 「묘사」도 「설명」도 아닌 보다 폭넓은 학문적 시사를 가지고, 그 때문에 조선/한국연구의 범위를 넘어 사람들에게 읽혀, 논쟁의 중심이 되는 저작. 즉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의 조선/한국정치연구에서-그리고 필경 일본의 정치학 전반에 있어서도-결여된 점은 바로 이러한 연구 자세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구와 전혀 다른 미국연구의 배경에 있었던 것은 미국사회의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일본에서의 주목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으며, 그러한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자가 연구자로서 「살아남기」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의 「묘사」나 「설명」만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기본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결과로서 연구자 개인이 가지는 고유의 학문적 배경에서 유래하는 학문적 「문제」와 그 「문제」에서 발하는 고유의 연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조선/한국연구가 얼마나 편했었가를 의미한다. 광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연구대상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의 조선/한국연구와는 달리, 이웃나라, 그것도 역사적·문화적으로는 물론, 지금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웃나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일본의 조선/한국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생계수단」에 직결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한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랬기에 연구자들은 그다지 깊은 궁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어느 정도 「읽어 주는」 것이 가능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보인 이후에는 현저해졌으며, 지금의 구태의연한 연구 상태는 이러한 일본의 조선/한국연구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진행되는 세계화는 확실히 한국이 「이웃나라」라는 의미를 상실케 하였으며, 이는 현저해지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층 더 심해지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조선/한국연구를 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자연과학의 시도를 참고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4 장 「한국」이라는 이름의 실험장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논점」, 게다가 폭넓은 학문분야에 영향을 끼칠만한 커다란 학문적 가치를 가지는

「논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조선/한국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 개인적 관점을 배제하고 이 문제를 관찰했을 때, 명백한 것은 그것이 「조선」 혹은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 명칭이 붙은 지역 혹은 국민국가에 관한 여러 케이스의 총체 속에서 무엇인가를 골라내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무엇을 골라낼 것인가 또한 어떠한 이유로 골라내는가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연구자 개개인의 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미 중요한 논점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한국연구는 논점을 추려내는 준거점을 스스로의 외부에 두었던 것이다. 그 준거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혹은 일본의 여론 인식이었다. 여론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한다 라는 자세였던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의 학문적 상황인데, 많은 경우 그 준거점은 미국에 의한 연구였다.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중 어느 방법에서도 그것이 독자적인 논점을 생성해 낼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그 연구가 「미국의 재탕」이 될 것은 명백하며 -이것은 그 연구가 가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연구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심각한 것은 일본의 여론도 또한 고유의 스테리오타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즉 「오래된」 무언가의 「내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조선, 나아가서는 한일관계에 착목하는 관점과, 「오래된」 사고방식에 대한 안티 테제라고 칭하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새롭다」고 칭하는 관점이 실제로는 최근 20 년이상 반복되어 온 너무나도 충분히 진부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논점은 이미 사실상 다 충분히 연구된 것이라는 것이니, 이러한 연구에서 새로운 학문적 돌파가 생겨날 터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자연과학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분명한 것은 「지역연구」라는 학문이 구체적인 케이스를 갖고 그것에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학문이며, 연구자 개개인은 이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것은 이른바 「이론계」 연구에 대한 「실험계」 연구의 입장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험계」 연구가 그 학문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스스로 「실험가」로서 기능이나 그 기능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어떻게 사용되었을 때에 가장 높은 학문적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유명한 것은 원래 양자붕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리학적 현상의 관찰이 만들어낸 「카미오칸데(Kamiokande)」를 뉴트리노 발견에 전용(轉用)했다고 하는 코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씨의 에피소드일 것이다. 스스로의 기능과 「설비」가 도대체 어떠한 「실험」에 사용가능하며, 또한 그 실험을 어떻게 하면 「이론계」의 연구, 나아가서 학문전반과의 피드백을 가장 유효하게 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연구자가 바로 우수한 「실험가」이며 또한 우수한 「실험계」의 연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실험장치를 어떻게 유효하게 다루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기술함으로써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맺음말- 「상식」에서 「이론적 도전」으로

「조선/한국」이라고 하는 「실험장치」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며, 조선/한국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인접 학문에도 임팩트있는, 바꿔 말하자면 보다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즉 조선/한국 「연구」가 단순히 조선/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소개 · 해설이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한국「학」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결과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는 그것이 우연히 이웃나라에 대한 연구였으며 그 때문에 대충 안정된 수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지역 소개·해설에 만족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된 「시사해설」의 수요가 존재하는 조선/한국정치연구의 분야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왔다.

반복이 되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연구에 가치가 없다고 말함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웃나라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그리고 그것에 동반되는 특수성-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이상,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가 지금까지와 같은 형식으로만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은 그 시장, 즉 연구의 「독자층」을 상실해서 소멸하는 것 또한 운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할 때 우리들은 연구를 중단하고, 혹은 다른 분야-예를 들어 각각의 학문분야(Discipline)-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카미오칸데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조선/한국이라고 하는 단위, 그 자체가 이 시점에서의 현실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대상으로 한, 혹은 「사용한」 연구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사회에서의 중요성에만 의존해 온 이 특수한 지역연구를 보다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재발견하는 것이다.

조선/한국연구의 근본적 전환. 이를 위해 그 실마리가 될 「논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조선/한국연구가 해 온 것은 일본, 혹은 연구대상이 가지는 「상식」을 그 형태 그대로 받아들여 그 형태에 맞춰서 연구를 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과 연구대상의 「상식」 그 자체를 의심하며 지금까지 일본과 현지의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학문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⁷.

이렇게 문제제기했을 때 「그런 건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의 대학원생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것같은 학문분야(Discipline) 쪽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의 「조선/한국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 발상의 당연한 결과인 「독자적인 논점」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 「왜 그것을 조선/한국을 케이스로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서로 관련해 오면서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연구대상에서, 어떠한 학문적 공헌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다 큰 학문분야에 공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조선/한국이라고 하는 귀중한 케이스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근대화, 국민형성,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권위주의 체제화, 냉전, 민주화와 그의 정착, 그리고 세계화와의 관계. 고전적인 정치학의 논점을 죽 나열해 본 것만으로도 조선/한국이 특이한 케이스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보다 순수하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 학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특이한 케이스에서부터 평행하는 다른 지역연구나 이론연구에 대해 제언한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⁸.

7 비교정치학의 관점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조선/한국연구에서의 「상식」이 세계적인 「상식」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예는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그 정치범 숫자 등의 관점으로 보자면 결코 타국과 비교했을 때 과혹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온건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과감한」 저항도 그 규모나 결과로서의 희생자 숫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극히 「소규모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과대성장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국가는 공무원수나 조세부담률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카타야마 유타카(片山裕) 「20世紀東南アジアと“国民国家”(20세기 동남아시아와 “국민국가”)」, 니시무라 시게오(西村成雄)・片山裕編著 『東アジア史像の新構築(동아시아사상의 신구축)』 青木書店, 2001년

⁸ 필자의 조선/한국연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요시다 히로시(古田博司), 오구라 키조우(小倉紀藏)編 『韓国学のすべて(한국학의 모든 것)』 新書館, 2001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표1 일본의 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하는 발행년도·표제내 단어별 도서 타이틀 수

	韓国	Korea	中国
1990	151	172	1262
1991	139	140	1418
1992	160	132	1520
1993	153	145	1585
1994	184	126	1694
1995	242	116	1614
1996	169	156	1557
1997	161	150	1451
1998	172	140	1581
1999	186	123	1518
2000	188	139	1369
2001	170	130	1101

주 · NACSIS Webcat(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WW 검색 서비스)에 의함. 검색일은 2002 년 12 월 13 일 <http://webcat.nii.ac.jp/webcat.html> 참조.

표2 하버드 대학 소장의 발행년·표제내 단어별 도서 타이틀 수

書籍発行年度	'Korea'	'Kankoku'	'Han·guk'	'China'
1945-1950	140	5	25	707
1951-1955	213	3	83	724
1956-1960	272	4	170	926
1961-1965	291	19	350	1027
1966-1970	371	30	580	1209
1971-1975	377	33	1022	1598
1976-1980	473	48	1375	1995
1981-1985	514	80	1694	2376
1986-1990	667	85	1924	2752
1991-1995	686	73	1901	3293
1996-2000	939	63	No exact data	3743

주 · HOLLIS FULL CATALOG - Expanded Search 에 의함.
 검색일은 2002 년 12 월 13 일. http://128.103.60.91/F/HXTJGFPICKT43527MPYEUU9RJFRXC2DI11L7EHJ7ME3YBRT6L2-23981?func=file&file_name=find-d 참조

표3 일본정치학회편『年報政治学』、「학회전망」에서의 조선/한국정치연구의 주제 추이

1994	민주화	북한	학생운동	근대					
1995	국제관계	근대	북한	경제발전					
1996	식민지	한국전쟁	경제발전	노동	통상마찰	근대			
1997	해방	권위주의	식민지	경제발전	북한	내셔널리즘	정치경제	정치경제	정치경제
1998	개설	통일	관료제	개발	납치				
1999	개발과 사회	개발과 사회	선거						
2000	선거	민주화							
2001	NGO	선거	행정	내셔널리즘	선거	북한	북한		
2002	통화위기	통화위기	통화위기	노사정책	경제정책	내셔널리즘	권위주의	권위주의	NGO